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정답 및 해설

*최근 수정일 : 2023.12.18.(월)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5. ④ 06. ① 07. ①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⑤ 14. ④ 15. ① 16. ⑤ 17. ④ 18. ② 19. ②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정치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초대 가수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한 학생회 회의를 정치로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가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 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행정 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도 중시한다.
-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부합해야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 ⑤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형식적 법치주의는 명목상 법률에 의해 통치 질서가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③ 평화 통일 지향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

가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②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와 관련 있다.
-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⑤ 문화 국가의 원리는 학문과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 과잉 금지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A는 과잉 금지 원칙이다. ㄱ. 과잉 금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적 요건으로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ㄴ. 과잉 금지 원칙은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인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ㄷ.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t 시기에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와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각각 실시되었으므로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④ t~t+2 시기 중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으므로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인 t+2 시기에 B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B당이다. 따라서 ㉔은 B당이다. ㉓, ㉔이 동일하다면 t+1 시기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A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인 B당이 아니므로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의 행정부 수반과 달리 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③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⑤ ㉓, ㉔, ㉔이 모두 동일하다면, ㉓, ㉔, ㉔은 모두 B당이다. 이 경우에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모두 대통령제이며, 의회가 내각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6.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 B는 국무총리, C는 대통령, D는 국무회의, E는 헌법 재판소, F는 대법원이다. ①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한다.
- ④ 대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⑤ 국회와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7. 우리나라 지방 자치 이해

정답 해설 :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① 지방 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통제 수단이다.
- ③ 법률 제정 및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 ⑤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8.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③ 근로 계약 체결 시 최저 임금법에 근거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원칙이 등장하였다.
- ②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된다.

9.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ㄷ.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과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 재판소에 침해 여부의 판단을 청구하는 심판인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ㄴ.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법 시행 규칙 조항이 병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10. 근로자의 권리 이해

정답 해설 : ③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C의 근로 시간은 8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1시간, D의 근로 시간은 7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30분이므로 C와 D의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뿐만 아니라 A가 소속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A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 B는 이에 불복하려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C는 18세이므로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C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C와 E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사용자인 E는 D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⑤ 정에 대한 미성년자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의 법정 대리인인 B는 정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인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갑은 계약 체결 당시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② A와 을 사이의 계약은 A가 을의 제안을 수락한 시점, 즉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에 성립하였다.

③ B는 병의 사기를 이유로 A와 병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A는 정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정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2.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이해

정답 해설 : ⑤ 공작물의 점유자인 A가 병에게 발생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A는 병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사용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②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청구하는 것이다.
- ③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동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④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배상이 원칙이다.

13. 정치 참여 집단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다. 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 ② 국회는 국정 감사권을 행사하며 행정부를 견제·감시한다.
- ③ 시민 단체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을 담당한다.
- ④ 정당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14.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ㄴ.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을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ㄷ. 12세인 무는 형사 책임 무능력자이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연령인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갑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ㄷ. 병은 심신 상실의 상태가 아니라 심신 미약 상태에서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적 비난 가능성인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15.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① 배상 명령 제도는 유죄 판결 시에 활용할 수 있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갑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법원은 원칙적으로 병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한다.
- ③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다.
- ④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국선 변호인은 일정한 상황이 되면 국가가 선임하는 것이지만 법원에 신청을 해야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⑤ 법원은 집행 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 관찰과 같은 보안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선고 유예는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을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구속 상태에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치료 감호는 무죄 판결을 받은 심신 상실자의 경우에 명할 수 있지만, 을은 심신 상실자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판결이 확정되면 판사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된다.

17. 가족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④ 병과 B의 해외여행 출발 당시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고, 이로 인해 A의 친생부모인 갑과 을은 A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또한 병이 B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므로 A와 B 간의 형제자매 관계도 형성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갑은 A를 양육하였으므로 을과 달리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없다.
- ② 병은 미성년 자녀인 B에 대한 친권을 가지며, 재산 관리권은 친권의 내용에 속한다.
- ③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부모의 권리인데, A는 입양 당시 이미 19세이므로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며,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A이다. 갑은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B 간에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달리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C의 상임 이사국은 대륙별 안배를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니다.
- ④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갖는다.
- ⑤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善)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 ③ 국가가 스스로 국력을 증가시켜 상대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 ④ 국가 간 공동의 이익 추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 ⑤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은 모두 국제 사회에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20. 선거 제도 분석

정답 해설 : ㄱ. 갑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인만 공천하고, B당의 지역구 의석률이 51%이므로 갑국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ㄴ.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비례 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B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 의석률이 49%를 초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A당, C당, D당, E당은 모두 비례 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의 합은 최소 51%이다. 따라서 B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이 50%를 넘을 수는 없다.

ㄷ. 현행에서는 정당 투표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가)는 유권자 중 투표자의 수를 늘리는 방안에 해당하는 것이지 유권자 자체의 수를 늘리는 방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